

치안산업진흥법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829
----------	------

발의연월일 : 2024. 12. 23.

발 의 자 : 윤재옥 · 김기웅 · 이인선
강대식 · 서천호 · 최보운
김성원 · 권영진 · 엄태영
김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인구구조의 변화 및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등 치안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피싱(Phishing), 딥페이크(Deepfake) 범죄 등 새로운 치안 위협요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의 인력 중심의 범죄예방 및 대응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치안 유지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치안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치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첨단 치안기술의 연구개발, 치안장비의 첨단화, 치안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치안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치안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치안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치안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치안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치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경찰청장은 치안장비 및 치안기술의 효율적 연구개발 및 품질 향상과 표준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치안장비 및 치안기술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와 그 보급 등의 업무를 추진함(안 제8조).

마. 경찰청장은 우수 치안장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유치·활용 및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사. 치안사업자는 치안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치안산업진흥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치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치안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안”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치안산업”이란 치안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개발, 설계, 유통, 연구개발, 정보제공, 컨설팅 등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치안사업자”란 치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치안기술”이란 치안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품질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5. “치안장비”란 치안 활동에 필요한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치안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치안산업의 국내·외 동향,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등 인적·물적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연구성과의 확산 및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치안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치안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경찰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치안산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치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치안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지원
3. 치안산업 특성화 대학·대학원·대학부설연구소의 지정·운영
4. 치안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인력 양성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2. 제1항제3호에 따른 치안산업 특성화 대학·대학원·대학부설연구소
3. 제1항제4호에 따른 치안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업을 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실시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치안장비등의 표준화) ① 경찰청장은 치안장비 및 치안기술(이하 “치안장비등”이라 한다)의 효율적 연구개발 및 품질 향상과 표준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치안장비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2. 치안장비등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그 밖에 치안장비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대하여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우수 치안장비의 보급 확대) ① 경찰청장은 우수한 치안장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치안사업자의 신고) ① 경찰청장은 치안장비 및 인력의 이용촉진 등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치안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의 범위와 내용 등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안산업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2. 치안산업 해외마케팅 및 홍보 활동 지원
3. 치안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유치
4.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정보 제공
5.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인증 획득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유치·활용 촉진) 경찰청장은 치안기술 개발주체가 해외 우수 전문인력을 유치·활용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우수 전문인력을 유치·활용하는 국내 치안기술 개발주체에 대한 자금 지원
2. 그 밖에 해외 우수 전문인력 유치·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안산업 관련 외국의 우수 연구개발기관(이하 “해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치안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지원
2.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연구인력에 대한 연수·훈련 및 고용 지원
3.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국내 입지 지원
4. 그 밖에 해외연구기관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치안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경찰청장은 치안산업 관련 시장 동향, 치안사업자 현황, 치안기술의 연구개발 현황 등 국내외 치안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제15조(치안산업 관련 통계조사) ① 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치안산업의 진흥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치안산업에 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치안 관련 단체의 장 및 치안사업자에게 치안산업 및 치안장비등과 관련된 인력현황, 경영현황 등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

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범위, 대상 및 주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제16조(협회) ① 치안사업자는 치안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치안산업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치안장비등의 이용 촉진 및 확산
2.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
3. 치안산업 관련 제도 개선 건의
4. 치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5. 치안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6. 치안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과 전문성 향상 지원
7. 규제 개선 일괄 지원을 위한 창구 운영
8.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⑤ 경찰청장은 협회가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경찰청장은 협회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경찰청장의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치안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조제2항 또는 제18조에 따라 경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